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 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7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인쇄업에 대한 세제지원율”

1974년 7월1일 인쇄문화시보에는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영업 및 소득표준을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출주도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인쇄업계가 오히려 경영난에 봉착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민족문화와 국가산업 차원에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인쇄업에 대한 특별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 이유로 “인쇄기술이 민족문화의 척도인 동시에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모든 상품의 간판 역할을 하는 등 상품가치를 제고시켜 수출증진과 외화획득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특히 “인쇄는 정밀한 고가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인쇄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에 있어서도 필름 및 기타 고가의 화공약품 등 많은 종류의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의뢰자가 원자재의 하나인 종이를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세법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관련업종인 제지업이 출판업에 비해 인쇄업의 세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① 인쇄업과 관련업종인 출판업은 영업세가 면세되어 있는데 인쇄업의 영업세율은 1000의 10이고, 일부는 1000의 20으로 되어 있어 이를 1000의 5로 인하해 줄 것 ② 소득표준율이 출판업은 100의 4~55인데 인쇄업은 100의 9~11로 되어 이를 100의 5로 인하 조정하여 줄 것 ③ 인쇄업 일부에 대하여 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영업세법 시행규칙 제4조 중 인쇄부분을 삭제해 줄 것 등이다.

● 성수기 기술인력 공황 우려

비수기임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성수기에 대한 ‘폭풍’을 염려했던 했던 기사를 소개한다.

1991년 7월 5일자 인쇄신문은 하절기의 무더위에 허덕이고 있는 인쇄업계에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성수기에 접어들 경우,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인쇄사에서는 성수기 ‘풀가동’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에 열을 올렸지만, 기술인력의 타사이동과 타업종으로의 이직이 잦고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을 뿐더러 기술축적도 여의치 못해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신문은 또 품질관리에 자신감을 잃은 인쇄사들이 아예 해외시장 개척을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견습사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존 기술인력의 작업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인쇄전문가들은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해외연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시설에 대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재배치가 거론된 것은 당시 국내인쇄사의 경우 2도 이상 인쇄기계에 배치되는 인원이 선진국에 비해 1명이상이 많았고, 공정별로 기술인력을 정예화해서 1차적으로 부족한 기술인력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인쇄신문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및 범업계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각인쇄사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경우 정부의 각종 대책미련에도 불구하고



고 부족한 기술인력이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1992년 하반기에는 인쇄기술인력부족의 대공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인쇄신문은 전망했다.

● 구매력 감소로 출판업계 위기

1968년도 7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동년 상반기 출판물월별통계 자료를 인용, 구매력의 현저한 감소로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서점이 파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시보가 분석한 1968년 출판물월별통계에 의하면 철학, 사회과학, 문학 등 11개 부문의 출판물이 3월에는 238종이었으나 4월 195종, 5월 144종, 6월 140종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7월에는 100종에 그치면서 불황이 점차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진에 대해 시보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책과의 거리를 멀리함에 따라 구매력이 현저히 감소했고, 저하된 독서의욕을 불러일으킬만한 양서출판이 활발하지 못하고 현상유지만을 하려는 일반적인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출판업계가 각종 교과서 및 참고서 발행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중학교 입시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각종 부교재 및 참고서 등을 전문으로 출판하던 우수한 출판업자들이 재고처분불능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도 이유로 꼽혔다. 시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외판의 여파로 인해 20~30년전부터 정상판매 활로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서점들이 6월부터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7월 초에는 전국에서 30여개의 서점이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만도 8개 서점

이 도산했으며 장안서림, 동신서점 등 전통있는 서점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인쇄사 공장등록 완화해야

무등록공장 양성화조치와 관련, 공장용도 변경불가로 고발조치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등 일부 인쇄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1991년 7월5일자 인쇄신문은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건설부에 보냈다고 전했다.

당시 건의서에서 연합회는 "인쇄업은 상시종업원 20명 미만 업체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고 경영이 취약한 업종으로 제조과정상 발주자와 인접한 도시에 불가피하게 밀집됐다"고 전제하고, 1990년 상공부고시 제90-33호에 의거, "조건부 공장등록을 받은 인쇄업체중 일부는 환경보전법 저촉사항을 개선하려해도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개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배출시설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는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인쇄업체의 건물용도가 대부분 점포, 사무실, 주택 등으로 공장용도로 된 것은 전체 22.8%에 불과하고 도심소재업체는 대부분이 전세건물에서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최소규모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